

배포시점 2025. 8. 13.(수) 09:00 보도 2025. 8. 13.(수) 13:00

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

- ▶ 윤창렬 국무조정실장,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
- ▶ 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,733명 단속, 621명 구속, 마약류 2,676.8kg 압수
- ▶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
- ▶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안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

- 정부는 8월 13일(수) 오전,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회의에서는 △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△ '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△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-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(의장)을 포함해 법무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관세청, 해양경찰청, 식약처,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,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.

①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-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,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, 마약류 2,676.8kg를 압수하였다.
 - 상반기 특별단속은 △ 해외 밀반입 차단 △ 국내 유통 억제 △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,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.

◆ 단속 주제별 주요 실적

- (해외밀반입) 검찰-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.5kg 밀수 사범 검거, 한-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·케타민 45kg 압수
- (국내유통) 경찰 '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' → 온라인 마약사범 1,663명 검거
- (의료용마약류)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 점검 23개소 적발

□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,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.

- 하반기 특별단속은 △ 현장 유통 차단 △ 유통경로 근절 △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
- 먼저,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·지자체·검찰·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.
- 또한,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(텔레그램 등) 및 오프라인(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)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,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·해양경찰청·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하였다.

② '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

-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'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,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,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.
- 주요 완료 과제로는 △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(경찰), △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(검찰) 등이 있었으며,
 -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였다.

-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△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△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△ 예방·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.

③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 개선방향

-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('25~'29)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하였다.
 -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 -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,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'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·재활 부분을 강화하며,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“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~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”며, “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,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”함을 강조하였다.
 -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,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	책임자	과 장	김민정 (044-200-2379)
		담당자	사무관	조우재 (044-200-2382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욱 (044-200-2889)
		담당자	사무관	조주현 (044-200-2337)
<공동>	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새봄 (044-203-6877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환 (044-203-6547)
<공동>	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	책임자	과 장	김동윤 (02-2100-8201)
		담당자	경 감	김진혁 (02-2100-8224)
<공동>	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	책임자	과 장	김진아 (02-2110-3345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균 (02-2110-3508)
<공동>	법무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	유성오 (02-2110-4075)
		담당자	사무관	김택균 (02-2110-4082)
<공동>	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미 (044-205-3128)
<공동>	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	책임자	과 장	송명준 (044-202-3870)
		담당자	사무관	공주영 (044-202-3871)
<공동>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02-2110-1567)
<공동>	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철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박승훈 (043-719-2802)
<공동>	대검찰청 마약과	책임자	과 장	이태순 (02-3480-428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록 (02-3480-2292)
<공동>	관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최문기 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원 (042-481-7702)
<공동>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곽병일 (02-3150-0141)
		담당자	경 정	길민성 (02-3150-2171)
<공동>	해양경찰청 형사과	책임자	과 장	주용현 (032-835-2058)
		담당자	경 정	박주식 (032-835-2161)
<공동>	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	책임자	과 장	최혜영 (033-902-5450)
		담당자	연구관	조지영 (033-902-5454)

붙임1

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

① 단속 결과: 3,733명 단속, 621명 구속, 마약류 2,676.8kg 압수(4.1~5.31)

② 주요 단속 실적 사례

<해외 밀반입 차단>

- 검찰-세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선별(68건) → 캄보디아발 범죄정보 포착하여 필로폰2.5kg(8만명분) 밀수 사범 검거(검찰·관세)
- 무역선 합동검색, 한국-태국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600kg·케타민45kg(2,150만명분) 등 밀반입 차단(관세·해경·검찰)

해양경찰청 관세청

강릉 옥계항 코카인 마약류 밀반입 적발 (4.2)

단속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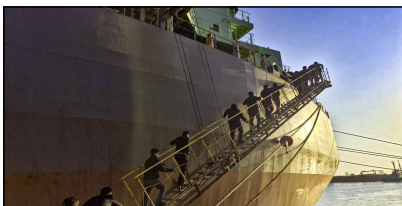
미국 연방수사국(FBI) 및 국토안보수사국(HSI)으로부터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노르웨이 선적 내 대량의 마약 은닉 정보 공유 및 합동분석(4.1) → 관세청·해경청 합동수색 → 역대 최대인 약 1.7톤(t) 규모의 코카인(시가 8천5백 억원 상당, 약 5,700만명 동시 투약가능) 적발(4.2)

조치

합동수사본부 설치(해경 47명, 관세 7명)하여 피의자 조사 및 과학수사 진행하여 피의자 4명 구속 → 美FBI, 美DEA, PDEA와 하선선원 4명(체포영장 발부) 및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 국제공조수사 中

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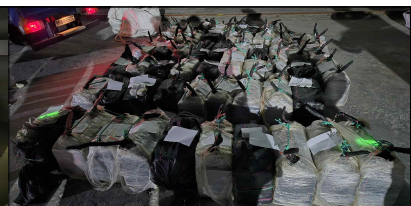
신속한 정보공조를 통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 사례이며, 해양을 통한 밀반입 시 부처협조 및 정보공조의 중요성 시사



선박 전체 합동 정밀검색



격벽 내 공간에 은닉



압수 코카인 총 56자루

<국내 유통 억제>

-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, 1,663명 검거(경찰)
- 전국 125개 클럽 등 합동점검, 외국인 마약사범 21명 등 검거(경찰·출입국·국정원)

외국인 전용 클럽 업주의 마약류 유통 적발 (6.13)

단속개요 외국인 전용 클럽 업주의 마약류 유통 혐의 첩보입수 후 증거 확보 등 수사 → 범정부 합동단속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·출입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업주 및 종업원·손님 등 6명 검거 → 클럽 내부 천장, 벽 등에 은닉한 엑스터시 54정 압수(6. 13.)

조치 업주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상선·유통책 수사 중

시사점 범정부 합동단속 시행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(경찰-마약사범 수사 / 출입국-외국인 단속)·인력 등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단속 효과성 제고



마약류 수색



업주가 은닉한 마약류

<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>

- 프로포폴·ADHD 치료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68개소 합동점검 및 23개소 적발(식약),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·판매조직 9명 적발(검찰)

식약처
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합동점검 (4~6월)

단속개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→ 과다처방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처방사유 조사 등 현장점검 →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 및 수사의뢰(타당성 미인정시)

조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총 68개소 점검 23개소 수사 의뢰(「마약류관리법」 제5조제1항 관련)
→ (사례1) 프로포폴(마취제) 지속·과다처방사례 등을 선별, 점검하여 월1회 초과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의사 A 수사 의뢰
→ (사례2) 메틸페니데이트(ADHD치료제) 과다처방(동일환자 1년 간 총 4,340정 처방)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의사 B 수사 의뢰

시사점 저인망식 사후 점검이 아닌,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통한 선제적 핀셋 점검으로 높은 적발률(약 34%) 달성

전략별 주요 과제

전략	주요 과제	5년 후 목표
<p>1</p> <p>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잠입수사 도입 및 온라인 마약유통 수사 강화 ☑ 텔레그램·다크웹 채널 1.3만개 감시 ☑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☑ 유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, 국제공조 확대 ☑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대상 성분 확대 ☑ 신종 마약류 통제물질 지정·공고제 운영 ☑ 약물운전 단속 권한 강화 	<p>마약류 공급사범 5,060명('24 대비 10% ↓)</p> <p>의료용 마약류 공급 대비 오남용 처방률 0.03%('24 대비 0.02%p ↓)</p>
<p>2</p> <p>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중독상태별 치료기관 구분, 맞춤형 치료 제공 ☑ 중증 중독자 재활 위한 '숙식형 한걸음센터' 설치 ☑ 중독치료 참여 위한 인센티브 제공 ☑ 재활시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☑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-치료-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	<p>마약류 중독치료 환자수 30,000명('24 대비 3배 ↑)</p> <p>재활 성공률 60.0%(신규) <small>* 사회생활 사예관리지 중 6개월 단약유지</small></p>
<p>3</p> <p>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대국민 장기 캠페인 실시 ☑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☑ 초·중·고 표준화된 교육 지원 ☑ 가정 내 온라인 교육 지원 ☑ 중앙-지방간 정책연계 강화(지자체 참여 확대) 	<p>마약류 종합 인식도 67점('24 대비 5점 ↑)</p> <p>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지수 90점(신규)</p>
<p>4</p> <p>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 ☑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☑ 교정시설 내 범죄학습 적발시 제재 강화 ☑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 재입국 규제 강화 ☑ 입영 자원에 대한 선제적인 마약류 검사 실시 	<p>1~20대 마약류 사범 5,000명('24 대비 10% ↓)</p> <p>외국인 마약류 사범 2,030명('24 대비 10% ↓)</p>